

유럽(EURO) 단일통화 동맹의 조건

<<목 차>>

1. 유럽의 경제
1.1 국민총생산
1.2 생활수준 및 소비행태
1.3 역외교역
2. 단일화법안 및 마스트리히 조약
2.1 Single Act
2.2 마스트리히 조약
2.3 경제정책 조정
3. 경제 및 통화동맹의 잇점
3.1 우호적 기업환경
3.2 거시경제적 성과
4. 아시아와의 관계

유럽 통화 동맹 (Monetary Union)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요한 시안에 기초하고 있다.

- 3억 7천만명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완전 자유교역의 단일 시장
 - 주요 투자자들의 참여와 함께 달러화 및 엔화에 대항할 수 있는 단일화폐(유로 : Euro)탄생
- 통화동맹은 유럽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이고 강력한 성장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자율 및 세율인하, 관료적 형식주의 감소, 그리고 저축율 제고 등 기업들에게 중요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이로서 기업들은 원가절감을 통한 제품가격 인하와 유럽 및 여타 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증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 그 첫번째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동반치 않은 성장이 될 것이다.

유로의 국제적인 힘은 유럽내

기관들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실제 반인플레이션과 유럽 기업들의 수출력에 기인한 구매력으로 유로는 강력한 화폐가 될 것이다.

유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몇몇 국가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달러대신 자국 외환보유를 유로화폐로 대체할 것이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이자율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유럽의 경제 및 통화동맹의 또 다른 주요결과는 유럽과 기타국들 간의 관계 강화이다. 단일통화로서의 '유로'는 보다 성공적으로 미국과 일본기업들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 이익중의 하나는 여타국들의 경제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은 유럽과 여타국들간의 상호시장 접근에 근거한다.

특별히 경제 및 정치적인 이유로서 유럽은 아시아와의 관계강화에 호의적이며 따라서 경제 및 통화동맹은 아시아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유럽의 경제

1.1 국민 총생산(GNP)

미국보다 24%, 일본보다 69%가 높은 약 7조 9,000억불의 GNP를 가진 유럽연합은 세계1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을뿐 아니라 다음의 네가지 주요 요인을 갖고 있다.

1. 고도의 수송 및 통신망 등 사회간접시설 발달
2. 양질의 노동력
3. 3억 6,700만 인구의 광대 소비시장
4. 기술력 : 항공, 화학, 의학, 통신

전체적으로 서비스산업은 EU GNP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이 32%, 농업이 2%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아일랜드가 58%로 최저치를 그리고 프랑스가 70%로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모든 EU국가들의 GNP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2 생활수준 및 소비행태

생산체제가 어렵잖아 동일하다 해도 생활수준이 같을 수는 없다.

전체유럽을 볼 때 아일랜드를 제외한 북구 국가들의 GNP가 남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1인당 GNP의 경우 독일은 포르투갈의 3배가 되나 북구국가들은 생활비가 비싸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들은 1인당 GNP를 분석할 때 보여지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이는 일련의 소비행태에서의 차이점을 나타내 주는데 예를 들어, 식료품에 대한 유럽소비자들의 평균지출 비중은 19%정도인데 반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지에서는 30%를 웃돌고 있다.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소비자행태는 거의 유사하며 따라서 식료품과 의복비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생활수준을 영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역외 교역

유럽은 수출의 63%, 수입의 62%를 회원국간 역내 교역에 의존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 제1의 수출국임과 동시에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수입국이다.

유럽의 역외교역비중은 전세계 GNP의 10%~12%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아시아국가들과의 교역이 상당히 진전되어 왔으며 특히 중국, 한국, 홍콩, 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재 유럽은 섬유 및 전자제품을 위주로 수입의 25% 이상은 아

시아 국가들로부터 구입하고 있으며 기계류, 통신, 수송 등 수출의 1/5 이상을 아시아국들에게 하고 있다.

2. 단일화 법안(Single Act) 및 마스트리히 조약

2.1 Single Act

유럽의 경제통합은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시작되어 1957년 로마조약이 처음으로 체결되어 유럽경제사회(EEC)가 탄생되었다. 동 조약은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 등 공동시장의 4대 이동의 자유원칙을 설정하였다.

공동시장의 목적은 1960년대 역내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를 계기로 부분적으로 달성되었으나 로마조약 입안자들은 조약내 숨어 있는 상당수의 문제점들을 과소평가 하였다.

이에 1986년 EC집행위는 1993년 1월 1일 단일 역내시장 설립을 목표로 하는 단일화 법안을 채택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EU 기관들로 하여금 300여가지 지침을 채택토록 하였다.

이들 지침들은 전산업부문에 걸친 각 회원국들간의 규범들을 통일하도록 되어있으며 모든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토록 했다. 따라서 설령 국가간 규정의 차이가 계속 존재하더라도 상품의 자유유통을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호인정의 원칙이러한 유럽규범을 충족한 제품은 역내에서 자유

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통상 동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있는데 이는 곧 유럽단일시장이 완성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2.2 마스트리히 조약

유럽 단일통화의 창설은 단일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는 요소인데 사실 각 유럽 국가 및 기업들간의 경쟁은 종종 과도한 환율변동에 따라 좌우되어 왔었다.

1992년에 있었던 이탈리아와 영국화폐의 평가절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단일화폐의 탄생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간의 비교가 용이해지며 따라서 경쟁도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통화는 회원국들의 경제수준이 비등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때문에 1992년 2월 단일화 조약직 후에 몇몇 기준들이 설정되었다.

EU는 제3단계 유럽통합을 추진키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했다.

- 가격안정 : 인플레이션을 1.5% 이하
- 이자율 : 장기이율 기준으로 3개 최저율 평균치와 비교하여 2% 이내
- 예산적자 : 국가예산 적자는 GNP의 3% 이내
- 부채율 : 공공부채가 하향추세(60% 이하)일 경우에 한해 GNP의 60%초과
- 환율안정 : 제3단계 이전 2

년간 일개국 화폐가 평가절하 되지 않아야하며 EMS(유럽통화제도)를 기준환율변동폭이 2.25% 이내

EU는 금세기말까지 단일화폐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참여 국가들의 굳센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1998년까지 상기 기준들을 충족한 국가들은 1999년 1월 1일부터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여타 국가들은 좀더 기다려야 될 것인데 그때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가입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진전상황으로 볼 때 공공부채가 GDP의 125%에 달하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벨기에, 그리스 등의 국가들은 1997년말까지 마스트리히 조약 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영국과 덴마크 등은 설령 기준을 충족할 경우이라도 단일통화에 참여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1999년~2002년간 기업들은 제품을 판매할 때 유로나 또는 환율변동폭이 설정된 개별국 통화로 결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채로 대표되는 채권은 유로로만 발행될 것이며 이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은행간 거래와 주요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들은 직접적으로 유로로 거래될 것이며, 200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거래가 유로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약하여 단계별 단일통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998 : 참여국가 선정 및 유럽 중앙은행 설립
- 1999 : 환율변동폭(Exchange Parities)설정, 유로 채권발행 및 유로 통화정책 확정. 기업은 자국 화폐와 같이 유로 사용 가능
- 2002 : 유로화폐(동전 및 지폐)발행; 자국화폐의 법적 화폐지위 취소

2.3 경제정책 조정

안정된 가치를 달성할 경우 단일 유럽통화는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간 개별경제정책들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주요 경제결정사안들은 다음에 따라 유럽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2.3.1 경제 정책

15개 회원국의 경제정책 조정은 현재와 같이 EU 각료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이다.

- 위원회는 매년 경제정책추이(인플레이 및 공공재정, 이자율안정 등에 대한 공동목표)를 확정 및 채택
- 위원회는 과도 재정적 자국을 선정하여 안정화 권고
- 과도 적자국에 대한 재제조치

2.3.2 통화정책 : 유럽 중앙은행의 주요 역할

가격안정화에 우선 임무를 맡게 될 유럽중앙은행(BCE)은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모든 참여

국가들에 대한 변동율이 설정되는 1999년 1월 1일부터 운용될 것이다.

또한 BCE는 199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설립되어 단일화폐 탄생의 과도기 역할을 수행한 IME (Institut Monetaire Europeen)를 대체할 것이다.

유로지역내 개별국 중앙은행들은 없어지지 않고 BCE와 함께 활동하게 되며 이외에 유럽 단일 통화정책 설정과 각료위 지침에 따른 변동율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SEBC(Systeme Europeen de Banque Centrales)가 설립될 것이다.

또한 국별 중앙은행들은 BCE의 통합부분이 되어 각 은행총재들은 BCE총재단의 위원이 될 것이다. 결국 중앙은행들은 여수신 및 결제수단 제공 등 고유의 활동을 유지하는 한편 BCE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2.3.3 외환정책 : 위원회 = 최고기관

EU 각료위원회는 대외 유로 통화정책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시장 개입이나 환보유관리 등은 유럽 중앙은행이 직접 관할하게 된다.

3. 경제 및 통화동맹의 이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및 통화동맹은 상품 및 서비스, 인적 자원 이동의 자유 및 엔과 달러에

대응할 강력한 단일통화 창설이라는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들 요소들은 유럽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 성장에 우호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3.1 우호적 기업 환경

(원가절감)

하이테크 분야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대규모 초기 고정비용 및 최소의 변동비용을 필요로 한다.

기업들은 통합된 거대시장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요 고정비용을 분할할 수 있게 되는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자율 인하)

이태리 같은 몇몇 유럽국가들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실 이와같은 높은 이자율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잠재적 환평가절하에 대한 위험부담비이다.

단일통화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되는데 이는 반인플레이 통화정책과 예산정책 등 공공행정에서의 비용절감이 유로의 이자율 인하능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행정비용 절감)

행정비용 절감 또한 중요한 장점인데 아마도 경제 및 통화동맹의 가장 흥미있는 부분중 하나가 될 것이다.

유럽국가들간 환전비용은 유럽 GNP의 0.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역내 자금흐름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단일통화로 인한 환관리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혜택의 대상은 기업의 회계부서들인데 1999년부터 모든 기업들은 유로화로 회계를 할 수 있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유럽법적으로 특별지위를 얻게 되어 기업들은 개별국 법규 테두리로부터 독립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 및 법인화되어 모든 관계자들에게 유효한 단일회계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금(내국세)만은 현지국 통제하에 남게된다.

(세금인하)

유럽 국가내 세제통일작업은 아직 시행치 않고 있으나 제도상의 메카니즘은 세율의 최적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세금이 적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 결국 국가간 경쟁으로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세금을 인하하게 될 것이다.

3.2 거시경제적 성과

앞서의 조치들은 분명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의 본질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자율 인하 및 행정절차 완화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며 주요 그룹들은 미국과 일본의 경쟁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유럽내 경제활동

을 촉진하여 경제싸이클 같은 불가피한 영향력을 극복하는 성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낙관론은 비인플레이 성장의 문제로서도 타당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성장은 정책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투자와 기업활동에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한다.

비인플레이 성장의 세가지 이유는

첫째 : 새로운 환경아래 기업들이 실현한 경제는 부분적으로 제품판매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둘째 : 성장은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이 고용창출에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을 경우 공공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의 행정부서 등에서의 고용은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은 그 자체로서 상당수준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곧 임금을 억제하게 되고 따라서 잠정적 인상요인을 제거하게 된다.

셋째 : 유입 (imported)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역내화폐의 지속적인 우월지위나 유로의 강한 국제적 구매력, 그리고 유럽기업의 대미, 대일 수출능력 제고 등으로 인해 하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유럽 화폐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동시에 아시아 등

지에서 외환보유시 부분적으로 달러화를 대체할 것이다.

유로의 강세가 EU의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즉, 인플레이를 유발치 않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마진폭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마진폭은 투자저하 같은 경기침체를 방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끝으로 성장은 일정수준 공공 및 사회비용을 유지하면서도 세금 압박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 및 통화동맹은 유럽 경제의 건전하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 줄 것이며 이는 예산 및 세금수준에 관한 정책적 공동경제를 수립토록하여 어려움이 있을 시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토록 한다.

4. 아시아와의 관계

향후 EU의 경제 및 재정적 비중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제3국으로부터 각별한 시선을 집중받게 될 것이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

아시아 또한 마찬가지이며 유럽 국가들은 같은 잠재력을 가진 아시아와의 파트너쉽을 희망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이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양 지역간 교역은 이러한 관계를 보다 잘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EU수입의 25% 이상을 그리고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양국간 경제적 결속이 더욱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반덤핑과 같은 장애요인이 다소 있으나 범세계적인 통상협체(WTO) 내에서 건설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유럽/아시아간 경제관계 발전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아시아내 유럽기업강화
- 유럽내 아시아 기업강화 : 상품수출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나 여타 관심 사업에의 참여
- 양지역기업간 협력강화로 역량공유 및 경쟁에 공동대응

유럽은 거대시장으로서 높은 구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활동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더욱이 경제 및 통화동맹으로 시장접근이 더욱 쉬워졌다.

수입제품이 일단 유럽역내에 들어오면 역내제품처럼 모든 역내국경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절차가 제품이 들어오는 국가에서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자금의 흐름이 원활해 진다.

그러나 유럽시장 역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있다. 시장 승리를 위해서는 현지 소비자 행태, 법규 및 행정적 제약 그리고 경쟁의 강약점 등을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